

## 학생자치법정 참여 경험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사례 연구

### - 중학생의 적법절차의 권리 인식 -

이동훈(서울대 대학원) · 문호성(장충고) · 박성혁(서울대학교)\*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관련 이론과 연구의 검토
  - 1. 학생자치법정의 의미와 교육적 효과
  - 2. 적법절차의 권리
  - 3. 관련 연구의 검토
- III. 연구 대상과 방법
  - 1. 연구 대상의 소개
  - 2. 자료 수집과 분석
- IV. 학생들의 적법절차 권리 인식
  - 1. 절차적 적법절차에 대한 인식
  - 2. 실체적 적법절차에 대한 인식
- VI. 맺는 말

본 연구는 학생자치법정의 참여 경험을 통해 기대되는 교육적 효과들 가운데, 참여 학생들이 적법절차의 권리를 인식하고 내면화하는 상태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생자치법정을 실시하는 서울 시내의 중학교 한 곳을 대상으로 관찰과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해석을 하였다. 연구의 결과, 먼저 학생들은 학생자치법정이 통지절차의 준수, 청문 기회의 보장, 공정한 심판기구의 구성 등 절차적 측면의 적법절차의 권리를 비교적 잘 보장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학생들은 기존의 학교생활규정에서 학생자치법정의 도입을 위해 제정한 생활평점제로의 변화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상·벌점제에 의해 운영되는 생활평점제가 사실상 벌점 위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 교신저자(psh6402@snu.ac.kr)

결과는 학생자치법정이 교육적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하여, 첫째 생활평점제의 도입과 제정 과정에 학생들의 참여 경험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구체적 운영 과정에서 상점 활용을 확대하여 학생자치법정 제도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주요어 : 학생자치법정, 적법절차의 권리, 절차적 적법절차, 실질적 적법절차, 상·벌점제, 생활평점제, 사례연구**

## I. 들어가는 말

학생자치법정이란 지각, 복장규정 위반, 휴대전화 규정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교칙위반 사항에 대하여, 기존 교사 중심의 생활 지도나 징계 절차 대신,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판·검사, 변호인, 배심원 등의 역할을 맡아서 재판을 실시하여, 해당 교칙 위반 학생에게 ‘교육처분’을 내리는 대안적·참여형 프로그램이다. 학생 징계 절차의 핵심은 징계 과정에서 자기변호 기회를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징계 절차는 이를 형식적으로 실시하거나 단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수준의 진술 기회에 한정되어, 적법 절차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학생자치법정은 기존의 징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이 중심이 되어 학생들의 입장에서 사안에 대한 개인적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반영한다.

학생자치법정 제도는 2006년 5개 고등학교에서 시범 실시된 이래, 2014년 현재 전국 1,500여개 학교로 확산·보급되어 실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학교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초등학교로까지 확산됨으로써 제도화의 단계로 접어든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학생자치법정이 학교폭력 예방, 학생 책임감 향상, 법에 대한 가치 및 태도의 확립, 동료효과(peer effect), 법의식, 법태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주선, 2009; 류기형, 2013; 법무부·한국

\*\* 학생자치법정 제도는 2006년 광동고(경기 의정부), 제천고(충북 제천), 행신고(경기 고양), 상산고(전북 전주), 이우고(경기 성남) 등 5개 학교에서 시범실시 되었으며, 2007년 16개교, 2008년 23개교, 2009년 34개교, 2010년 49개교, 2011년 388개교, 2012년 660개교, 2013년 1045개교, 2014년 1580개교로 확대되어 있다(법무부, 2014).